

2002년도

농업계 10대 뉴스

1. 한·칠레 FTA 잠정 타결과 반대
2. 한·중마늘 밀실험상 은폐사건
3. 들불처럼 타오른 400만 농민투쟁
4.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축산농가의 총 비상
5. 태풍 루사 강타
6. 농특위 출범과 농민단체 탈퇴
7. 쌀대복지원과 소득보전직불제 날치기 통과
8. 농민단체, 대선후보 농정공약 촉구 활동 활발
9. 농축협조합장 및 지방의원에 농민들 대거 진출
10. 학교급식법, 농어촌복지특별법 등 농업관계 법안 재개정 운동 활발

2002년만큼 “多事多難”이라는 말이 실감난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DDA(도하개발아젠다)출범 이후 WTO 농산물수출강대국들의 압력은 거세지고 있고, 특히 정부의 한·중마늘 밀실험상에 이은 한·칠레FTA 타결은 400만 농민의 목줄을 죄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발생한 구제역에 콜레라, 태풍루사 피해, 쌀값폭락까지 겹쳐 이제 더 이상 숨쉴 작은 구멍조차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커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400만 농민들의 뜨거운 함성과 생명농업, 식량주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힘에 국내농업의 희망이 걸려있다.

올해 초부터 국내 사회일각에서는 그동안 농업계가 우려해왔던 '개방'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일부 신문·방송언론을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농업피해를 전제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추진 주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는 통상협상의 주체인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농업개방 대세론을 주장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급격히 퍼져나갔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칠레FTA협상 추진이다.



지난 2년만에 걸쳐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막대한 농업피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잠시 주춤했던 한·칠레 FTA협상추진 문제는 지난 6월 정부와 청와대의 한·칠레 FTA협상 타결음모가 드러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청와대 이기호 경제특보가 칠레를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라고스 칠레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칠레 FTA 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할 것'과 '도하라운드 세무협상 타결 이후에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정부와 청와대가 밀실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 농민이 2년여 동안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칠레 FTA를 일방적으로 타결하고 말았다. 말 그대로 국내의 아무런 합의과정 없이 국제협상을 정부 맘대로 덜컥 해치워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한농연을 비롯한 WTO국민연대 소속 79개 농민·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칠레 FTA 국회비준 거부'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운동' 전개에 돌입했다. 아울러,

현재 도시지역 국회의원의 서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 동참키로 하는 등 반농업적 한·칠레 FTA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

· 한·중마늘 밀실협상 은폐사건

청와대,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업자원부의 대국민합작 사기극

지난 7월 16일, 한 언론사가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2003년부터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마늘을 둘러싼 정부의 사기극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국내 50만 마늘농가의 생존권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전체 400만 농민의 분노는 그야 말로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



한·중마늘 밀실협상의 은폐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정부가 2000년 6월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시키는 무역보복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그야말로 굴욕적인 협상 끝에 합의를 하고 말았다. 더구나,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중국산 마늘수입에 대해 합의할 당시, 합의문 부속서에 '2003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을 한국 민간기업이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음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은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중국마늘 밀실협상'의 주범인 협상 관련자 즉각 전원 처벌을 요구면서 '한농연 마늘주산단지 시·군연합회장 긴급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치권 각 당에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관철'과 '국내 마늘농가 피해보상대책 즉각 수립' 등을 강력히 제시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이어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외교통상부 항의방문

을 전개하고, 한농연·남해군연합회를 비롯해 서산·제주·의성·남해·창녕군연합회는 집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규탄활동을 벌여냈다.

한편, 지난 6월 농협중앙회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 연장신청을 제출했으나, 무역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셰이프가드 연장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무역위원회의 전성철 위원장은 기각 결정 과정에 독립성이 훼손당했고, 정부가 내놓은 마늘산업종합대책을 검토해 볼 시간도 없었다면서 사표를 제출하면서, 한·중마늘 이면합의 은폐에 대한 대국민합작 사기극을 마무리하고, 줄속적인 마늘산업종합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이번 사기극을 무마시키려 했다.

이에 한농연은 지난 9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함께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정식 청구했으나 헌법소원이 판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결과는 셰이프 가드가 중단되고 중국산 마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는 2003년 1월 1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는 한·중 마늘협정의 효력이 한·중 마늘협정 무효 헌법 소원 결정 선고까지 발휘되지 않도록 한·중 마늘협정 합의서에 대한 가치분신청을 지난 11월 1일 김태욱 변호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위헌심사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정부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3

• 들불처럼 타오른 400만 농민투쟁

10월 22일, 전국에서 울려 퍼진 김대중 정권 농정실패 규탄 함성

지난 10월 22일,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는「김대중 정권 농정실패 규탄 400만 농민 1차 총궐기대회」가 농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는 1만여명의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 차량시위를 벌이며,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하는 등 전국적으로 3만 여명, 차량 4,000여대가 총궐기대회에 참석하여 김대중



정권의 농정실패를 규탄하는 함성이 메아리쳤다.

이는 지난 6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촉발된 대규모 농민투쟁으로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반농업적인 한·칠레FTA를 비롯해 태풍 '루사' 피해, 구제역 피해, 쌀문제, 농특위의 파행운동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농정실패'에 대한 400만 농민의 심판의 장이었다. 이에 「한농연 10대 요구 사항」을 채택해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김대중 정권 집권 5년동안 농업정책으로 농업예산과 농가 소득은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등 농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농정실패 정권과 외교통산부 장관, 농림부 장관 등의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이어,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장인 보라매공원에서 여의도 문화한마당까지 평화적인 가두행진 벌였으나, 경찰의 무차별적 폭력으로 참가자 1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 과잉 폭력진압으로 강제해산 시켰다.

이에 한농연은 집회를 마친 후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 사태에 대해 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 등 과잉진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강원도를 비롯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도연합회 회원들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시위를 벌이며, 상경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찰은 서울로 상경하는 농민들을 막아 곳곳에서 농민들과 충돌·대치했다.

11월 13일, 사상최대 12만명이 모인 '우리쌀 지키기 농민대회'

지난 11월 13일, 농민대회 사상 최대규모인 12만명이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 모였다. WTO 쌀 수입 개방 반대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고수부지 마당은 물론 스탠드와 무대 뒷편까지, 말 그대로 강이 아닌 곳은 모두 메우고 있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주최한 이날 전국농민대회는 시민·사회·노동단체까지 합세해 우리쌀 지키기에 함께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농업회생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의 대회에 참가한 12만명의 농민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쌀포대를 쓴 채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며 '쌀시장 개방 절대 안된다'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을 뜨거운 함성의 바다로 만들었다.

특히, 의미가 깊었던 것은 각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가해 '기필코 우리농업을 사수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며 농업을 지키는 것이 농민들만의 투쟁이 아닌 국민 모두의 투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것이다.

한편,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도 이날 대회에 참가해 각 당의 농정공약을 발

표했으나, 여러번 속아온 농민들은 후보들에게 야유를 보내며 계란 등을 투척, 분노를 터뜨렸다.

이날 대회는 오후 3시 경 대회를 시작으로 본 대회가 시작된 후 각 대통령 후보들의 농정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거리선전을 위해 문화마당까지 행진한 농민들은 오는 25일 제2차 농민대항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결의하며 6시30분경 자진 해산했다.

4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축산농가 총 비상

지난 5월3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을곡리에 소재한 농장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이 6월말까지 총 16농장에 전염시키는 맹위를 떨치며 안성지역 축산업을 그야말로 초토화 시켰다. 이는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25개월만에 또 다시 발생한 것이어서 큰 충격이었다. 게다가 2개월 동안 4개 지역에서 총 16건이 발생해, 약 17만두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발생농가 반경 10km농가들은 우체류 가



축에 대한 전면적인 이동제한조치로 수천억원을 상회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양돈농가 외에도 구제역으로 대일 돈육 수출이 중단되면서 육가공업계와 육류유통업체, 수출업체 등의 피해를 감안한 피해액은 수 조원에 이른다.

특히, 구제역 광마가 휩쓸고 지나간 안성지역은 전통적인 축산기반 자체가 뿌리 채 흔들리고, 살처분한 가축을 돈사 허문 곳에 매몰한 농장은 땅값 폭락으로 심리적 공황과 경제적 손실의 이중고를 감당해 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상기준 현실화'와 '객관적인 보상기준 마련'이라는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면서, 살처분 농가와 이동제한 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 당시 개선점으로 지적됐던 방역조직에 대한 개편없이 그대로 방역조직이 유지되면서 총 16차례의 잇단 구제역 확산을 자초함에 따

라 방역조직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와 축산농가들은 “지차체 보상평가심의회에서 산정한 현 시가 100% 보상”과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현 시가보상”, “강제 폐업된 농장의 휴업보상비 지급 및 생계비·경영안정자금 조속 지급”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보상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한농연은 대선공약 요구안으로 ‘방역청 신설’을 요구하는 등 방역대책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5

· 사상최악의 큰물피해 물고 온 태풍 ‘루사’ 강타

지난 8월 말터 몰아닥친 태풍 ‘루사’는 영동지역과 중남부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참혹하게 헤집고 지나갔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재산피해만 수조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액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184명에 달했으며, 하천은 2740개소 4205억원, 농경지는 3661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농작물피해가 침수 4만 5000ha, 도복 4만5000ha, 과실낙과 2만4000ha 등 11만4000ha에 달했으며, 농업시설은 비닐하우스 468ha, 인삼·버섯 454ha, 양곡창고 172동 등이 파손됐다. 축산시설의 경우에는 축사파손 571동, 가축폐사 62만 3000마리 등이다. 수리시설은 370개소가 파손됐고, 농경지 유실·매몰이 595ha에 달하는 등 그 피해규모만 보더라도 거의 절망에 가까웠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피해지역을 비롯한 전국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는 등 피해보상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태풍 ‘루사’의 가장 큰 피해당사자인 농민들은 여전히 비현실적 보상을 비롯해 피해복구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그 어느때 보다 ‘추운 겨울’을 면치 못하게 됐다. 쌀농가들만 보더



라도, 지난 봄 약정수매 체결 후 받은 선급금에 따른 수매를 하지 못한다에 따른 높은 이율의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농경지 유실과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값을 길 막막해 진 것이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태풍피해로 인해 빗마저 떠안게 된 농가 피해대책과 함께 '미질 하락'으로 인한 '쌀농가소득 하락 보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면서, 현실적인 영농재기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한농연은 태풍피해 직후 태풍피해를 입은 한농연 회원들에게 전국의 회원들이 성금과 지원활동을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6

• 농특위의 출범과 소득보전직불제 낫치기 통과

올해 초 농업계의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서 출범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파행운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한 예로, 농특위는 지난 6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금년산 쌀부터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공공비축제의 금년 내 법제화 △내년 중 양곡거래소의 개설 등을 골자로,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쌀산업종합



대책”의 내용을 의결한 것이다. 특히, 농특위는 분과회의, 상임위, 본회의 등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들의 요구 사항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위원간 부처이기주의와 보신주의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원투자가 거의 없는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한 대책을 수립해 놓고, 마치 농촌희생을 위한 최종 대책인양 언론을 이용해 국민을 호도했다.

더구나, 농특위는 쌀산업대책 논의 과정에서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수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농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을 본회의

안전으로 상정하는 등 끝까지 농민단체를 들러리세우기로 일관했으나,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소비자·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쌀소득직불제 도입', '생산조정제 시행' 등을 전면 유보키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예산안에서는 이미 전면 유보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등 농특위의 논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일 정부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기습적으로 날치기통과시키면서 농특위와 정부의 반농민적 행태는 극에 달했다. 이에 한농연은 농특위를 현 정권의 농정실패를 무마시키려는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참'을 선언하고 '농특위 해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7

· 1년여간 쌀 대북지원 촉구, 끝내 결실

올해 초 농업·농촌은 지난해 '쌀대란' 이후 쌀값폭락과 소득감소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영농철을 맞았지만 정부의 획기적인 재고처리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급정책은 물론, 명쾌한 가격 및 소득보장 대책마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작년 '쌀대란'을 촉발시킨 재고처리 문제였다. 정부가 수확기를 몇 개월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획기적인 쌀 재고처리 대책을 시행은커녕 방향조차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했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획기적인 쌀재고 감축을 위해 최소 300만석 이상의 대북지원'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4월 3일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을 계기로 진행된 남북경제협력교류를 통해 '쌀 대북지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식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촉구활동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8월이 다 가도록 '사료용' 지원을 비롯해 냉전이데올로기를 잣대로 한 퍼주기 논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급기야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쌀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켰고, 어려운 과정속에서 드디어 '쌀 대복지원'이 결정됐다.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제2차 남북경제협력 위원회를 통해 쌀40만톤과 비료 10만톤을 북측에 지원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이는 쌀 과잉재고 인한 금년 가을의 쌀대란을 막고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어서 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8

• 농민단체, 대선후보 농정공약 촉구 활동 활발

11월 5일, '제10대 대통령선거후보 초청 한농연 농정공약 대토론회' 개최

지난 11월 5일 한농연중앙연합회와 한여농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16대 대통령후보 초청 한농연 농정공약 대토론회'가 서울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회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를 한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향후 5년간 우리 농업의 미래가 결정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각당의 대통령후보들과 정책위의장들을 초청해서 농업관과 농정공약을 직접 들어보고 철저히 검증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4명의 대통령 후보는 농민들 앞에 자신들의 농업관과 공약을 밝히는 첫 자리였던 만큼 의미가 깊은 대회였다. 물론, 이날 대회를 준비한 한농연은 연초부터 준비해 마련한 '대선후보 농정공약 요구사항'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농정의 방향)을 수용하도록 함으로

써,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우리 농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대회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농연은 올해 말 대선국면을 맞아 '대선후보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 개최를 한해 최대사업으로 선정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한농연 대선공약위원회'와 함께 '대선공약 개발을 위한 실무추진반'을 꾸려, 약 3개월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주제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작업을 치밀하게 전개해 6월에는 '한농연 대선공약' 초안을 완성하였다. 한농연은 이렇게 4달 여에 걸친 토론과 연구작업 끝에 만들어진 '한농연 대선공약' 초안은 곧 바로 농림부를 비롯해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에 전달함으로써 이를 각 당 농정공약 및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냄으로써 11월 5일, 개최된 '대선후보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를 통해 집약시켜낸 것이다.

10월 23일, 농단협·전농 등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10월 23일, 우리쌀 지키기 농업회생연대(준)는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통일대비 △식량자급 등 17대 분야, 81개 세부과제를 요구하며,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국 개편 △여성농민센터 읍·면까지 확대 등을,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우유수급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 의원, 민주노동당 장상환 정책위원장은 전체국가예산의 10% 농림부분 확보 등 농민단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준비중인 공약을 소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가예산10%이상 농림부분 반영 △한·칠레 FTA 국회비준거부 등을 발표했으며,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농업투자예산 10%대로 확충 △WTO협상 농민참여 보장 등 내부에서 검토중인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장상환 정책위원장은 △농어민종합병원 설립 △농정관련 위원회에 농민대표 50% 참여 등 농정개혁 21대 과제를 이 자리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2000년부터 약2년여간에 걸친 “제4기 조합장 선거”와 올해 “6.13 지방선거”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대안과 기회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져왔다. 한농연을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가 앞장서서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과 “올바른 농민 조합장 선출”이라는 구호를 내건 “제4기 조합장 선거”는 협동조합개혁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면서 어느 때보다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능력 있는 조합장이 많이 선출되었다는데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한농연은 공명선거운동을 적극 벌여내면서, 155명에 달하는 농업경영인 출신의 젊고 강한 조합장을 배출해 냈을 뿐만 아니라, 이어 6월 13일 진행된 지방선거에서는 272명(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255명)을 당선시켜 지난 98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비해 70여명 이상이 지방자치에 진출하는 개가를 이루어냈다. 더욱 의미가 컸던 것은 농민대표로 출마해 단체장으로 당당히 선출되는 등 제도권으로의 진출이 보다 활발해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날로 심각해지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 그리고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한농연은 지난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제4기 한농연출신 농축협조합장 당선자대회”와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발족식 및 한농연 지방선거 당선자대회”를 개최해 자축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를 통해 농업위기 극복과 지역의 자주적인 결정권 제고, 협동조합의 발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결의해 더욱 빛을 발했다.

10

• 학교급식법, 농어촌복지특별법 등 농업관련 법안 재개정 운동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전개

지난 2001년 12월 5일, 한농연은 21개 농민단체를 아우르는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남용/이하 농단협)와 공동명의로 '학교급식에서 국내 농산물 사용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진행된 입법청원은 지난해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36명의 소개의원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은 학교급식의 제도개선과 질 향상을 통한 국내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촉진, 청소년 건강향상 등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을 지자체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국내 농산물 사용의 경우 우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내 농업·농촌환경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져 가는 현실에서 제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청원」은 그 나름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그 당시 현안이었던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월 임시국회 마저 각 당의 내부적인 문제로 정상가동 되지 못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지속적인 촉구활동을 벌여내며 상반기 국회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수 차례에 걸친 성명발표와 각 당 간담회를 통해 적극 요구하면서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권오을 국회의원이 입법발의 한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이 7월 25일 폐기되는데 이어, 한농연과 농단협이 공동 입법청원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마저 9월 11일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이 'WTO 협정위반으로 인한 통상마찰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고 폐기해 버린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9월 17일 각 당에 의원 입법 재발의를 정식 요청해 지난 10월 재발의 했으나,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률안을 몇 일 전에 폐기한 상황에서 재발의된 개정안을 다시 심의하기는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들면서 학교급식법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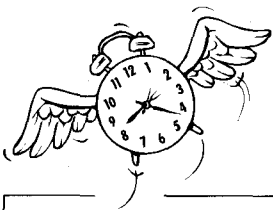


정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계류법안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한농연은 향후 '(준)학교급식네트워크' 등 사회단체와 연계활동을 통해 입법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활동

지난 3월 한농연은 '농어촌복지'에 관한 화두를 과감히 꺼내들었다. 그 이유인 즉은 WTO체제 이후 농업·농촌은 위기에 다쳐있고, 도·농간 소득·문화·환경격차가 커짐에 따라 농어촌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선진국의 예처럼 농업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적 가치를 뛰어넘어 농어촌·농어민 문제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한농연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농민단체와 농업계는 물론,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정치권, 학계 등 각계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면서, 지난 5월 16일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7월 들어 한농연은 약 2달 여에 걸쳐 전국 규모의 '100만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총 77,325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또한, 이어 진행한 전국 농촌지역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통해 38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았다. 이어, 10월에 접어들어서 한농연은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10월 31일)

한농연이 단독 입법청원 한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은 박희태, 김영진, 원철희 등 3명을 대표 소개의원으로서 총 16명의 국회의원 소개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그동안 정부 부처간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복지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농어촌지역의 사회보장을 비롯한 의료·교육·생활·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와의 형평성 보장과 최근 어려움에 빠져있는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의미가 더욱 컸다. 한농연은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대비 공약포함 관철활동'을 비롯해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추구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인농연**



〈한농연 정기대의원 총회 및 선거 일정〉

- 12월 21일 : 한농연중앙연합회 정기대의원총회 제11대 및 선거직 임원 선출
- 12월 26일 : 경남도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제15대 임원선출
- 12월 27일 : 경기도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제10대 임원선출
전남도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제10대 임원선출
경북도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제11대 임원선출
제주도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제8대 임원선출
강원도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
- 12월 30일 : 충남도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제9대 임원선출
전북도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제9대 임원선출
- 1월 14일 : 충북도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